2014년도 6월 28일 시행

서울시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행정법 (A책형)

해설 - 이형찬 교수(대구한국공무원학원)

1. 다음 중 우리 판례에 따를 때 사법관계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무상양여거부행위
- ② 국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부과행위
- ③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대부에 따른 대부료부과행위
- ④ 한국조폐공사가 행한 소속 직원 파면행위
- ⑤ 주한미군한국인직원의료보험조합이 행한 소속 직원 징계 면직행위

2.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주체의 의사는 비록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권한있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행위로서 통용되는 효력을 공정력이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이 A에게 귀화허가를 준 경우 그 귀화허가가 무효가 아니라면, 귀화허가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여 각 부 장관이 A를 국민으로 보아야 하는 효력은 행정의사의 존속력에서 나온다.
- ③ 형식적 존속력이 생긴 행위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④ 실질적 존속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형식적 존속력이 발생하지 않은 동안에는 상대방은 그 행위를 다룰 수 있다.
- ⑤ 행정의사의 강제력에는 제재력과 자력집행력이 있는 바, 제재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3. 다음 행정청의 행위 중 판례에 의해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지적공부 소관청이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
- ㉡ 건축물대장 소관청이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 ㉢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
- ㉣ 소관청이 토지대장 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 ㉤ 건물등재대장 소관청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4. 다음 ㉠, ㉡, ㉢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 ㉠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 ㉢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

㉠ ㉡ ㉢	㉠ ㉡ ㉢
① 철회 실효 취소	② 철회 취소 실효
③ 실효 취소 철회	④ 실효 철회 취소
⑤ 취소 실효 철회	

5.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세관청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선행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과세 관청인 피고로서는 위법한 선행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 ⑤ 광업권 취소처분 후 광업권 설정의 선출원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치는 적법하다.

6.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는 제시하여야 한다.
- ② 공법상 계약도 공행정작용이므로 역시 법률우위의 원칙하에 놓인다.
- ③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다.
- ④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⑤ 공법상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기도 하지만,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체결 여부만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다.

7.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량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인다면 이는 무효이다.
- ②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 ③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중 고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⑤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8. 행정계획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법한 행정계획의 시행으로 국민 또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면, 법령이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행정계획이 행정활동의 지침으로서만의 성격에 그치거나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만을 가질 때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갖지는 않는다.
- ③ 형량 시에 여러 이익 간의 형량을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객관성·비례성을 결한 경우를 ‘형량의 해태’라고 한다.
- ④ 행정계획에서 행정기관이 가지는 계획재량의 통제를 위한 법리로는 ‘형량명령’이 있다.
- ⑤ 형량의 대상 중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를 ‘형량의 흠결’이라고 한다.

9.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상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의무부과의 근거법규 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한다.
- ②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여야 한다.
- ③ 공공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해 점유자의 퇴거를 강제하기 위해 대집행을 사용할 수는 없다.
- ④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집행은 허용된다.
- ⑤ 대집행에 대해 상대방이 저항할 경우 그 저항을 배제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10.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중대한 처분이지만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한 때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

시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 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1. 「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만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② 「민법」 제758조와는 달리 동조는 점유자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다.
- ③ 동조의 영조물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개념보다 넓다.
- ④ 하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객관설이 주관설보다 피해자의 구제에 유리하다.
- ⑤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례는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면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라도, 손실보상은 공법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 ②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이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 ③ 판례는 구「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아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 ④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본다.
- ⑤ 원칙적으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의 전보제도로써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한 침해에 대한 보상인 국가배상제도와는 다르다.

13. 공무원의 직무활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심문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진술할 수 있다.
- ② 상관의 직무상 단순위법인 명령에 대해서 공무원이 복종하지 않더라도 징계는 받지 않는다.
- ③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공금의 횡령인 경우 횡령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집행중일 때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의 행동에도 적용된다.

1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있다.
- ②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다룰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

- ③ 협의의 소익은 상고심 계속 중에도 존속해야 한다.
- ④ 건축공사 완료 후에는 건물준공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
- ⑤ 경찰허가를 받은 경업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특허사업의 경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부인된다.

15.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② 판례는 당연 무효의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적이다.
- ③ 판례는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④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고,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⑤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즉 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6. 권한의 위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한의 위임은 위임의 해제, 종기의 도래 및 근거법령의 소멸 등에 의해 종료된다.
- ② 수임청은 그 권한을 위임청의 이름으로 행사하며 그에 관한 소송의 피고는 위임청이 된다.
- ③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 ④ 법령의 근거가 없는 권한의 위임은 무효이다.
- ⑤ 수임청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청에 재위임할 수 있다.

17. 다음 중 민중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 ㉡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의 유형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의 유형으로서 중지청구소송
- ㉣ 「공직선거법」상의 당선소송
- ㉤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 ⑤ ㉣, ㉤, ㉥

18. 공무원관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할 도지사의 공중보건 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승진임용신청권이 있다.
- ③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므로 「민법」상의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당연 퇴직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된다.
- ⑤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공립대학의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신청권을 가진다.

19.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자살을 기도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 ③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의보호조치의 대상자이다.
- ④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으나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경찰관은 즉시 그 사실을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0.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규정이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은?

- ①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②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 ③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④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정답 및 해설

1. <해설>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2.13. 선고 95누11023). 결국 공법관계에 속한다. 나머지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정답 ②

2. <해설> ② 구성요건적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③ 형식적 존속력(불가쟁력)이 생긴 행위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결국, 불가쟁력은 처분의 상대방이 취소재심으로 다룰 수 없다는 취지이지 직권취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④ 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형식적 존속력(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동안에는 상대방은 그 행위를 다룰 수 있다.

정답 ②

3. <해설> ㉠㉡ 구 지적법 제20조,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제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22. 선고 2003두9015). ㉢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7두7277).

정답 ①

4. <해설> ㉠ 철회, ㉡ 취소, ㉢ 실효

정답 ②

5. <해설> ① 과세관청이 부과한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7027). ② 동법 제6조 ③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두5686). ④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 지위가 소멸된다(대법원 1997.1.21. 선고 96누3401). ⑤ 구 광업법(73.2.7. 법률 제2492호) 제36조 제1호에 의한 광업권설정의 선출원이있는 경우에 다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함은 위법이다(대법원 1967.10.23. 선고 67누126).

정답 ⑤

6. <해설> ①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이 보아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두5948).

정답 ①

7. <해설> ①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을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것이다(대법원 1988.4.27. 선고 87누1106). ②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③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중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 509). ④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1.12.13. 선고 90누8503). ⑤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처분청으로서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두6663).

정답 ④

8. <해설> ③ 형량 시에 여러 이익 간의 형량을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객관성·비례성을 결한 경우를 오형량이라고 한다.

정답 ③

9. <해설> ④ 구 토지수용법 제18조의2 제2항에 위반하여 공작물을 축조하고 물건을 부가한 자에 대하여 관리청은 이러한 위반행위에 의하여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의무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작물의 철거, 수거 등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5.12. 선고 99다18909).

정답 ④

10. <해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③

11. <해설> ①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의 의미는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용물체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1.24. 선고 94다45302).

정답 ①

12. <해설> ① 관례는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도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면 손실보상은 사법적인 것이라고 보며, 공권이면 공법적인 것으로 본다. ②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③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및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공권상 권리이며 그 쟁송절차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한다(대법원 2006.5.18. 선고 2004다6207). ④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1.2.11. 90헌바17·18).

정답 ⑤

13. <해설> ② 상관의 직무상 단순위법인 명령은 취소사유이므로 일단 효력이 인정되며 이에 대해 공무원이 복종하지 않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②

14. <해설> ⑤ 경찰허가를 받은 경업자에게는 원고적격이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허사업의 경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정답 ⑤

15. <해설> ⑤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즉 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 ⑤

16. <해설> ② 수입청은 그 권한을 수입청의 이름으로 행사하며 그에 관한 소송의 피고는 수입청이 된다.

정답 ②

17. <해설> ㉠은 항고소송이며, ㉡㉢ 주민소송으로 민중소송의 일종이다. ㉣㉤ 당선소송과 선거소송은 대표적인 민중소송이다.

정답 ④

18. <해설> ④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대법원 2002.07.26. 선고 2001두205).

정답 ④

19. <해설> ⑤ 경찰관은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5항).

정답 ⑤

20. <해설> ①②⑤ 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모두 준용된다. ③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④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된다.

정답 ③